

2022년도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정기종합 감사결과

I 감사 개요

1 감사배경 및 목적

- 해운물류, 해상교통안전, 선원·선박관리, 항만건설·관리, 해양환경보전 등의 추진업무를 점검하여 해운·해양·항만행정의 실효성과 해상교통안전 강화 및 항만·어항건설의 효율성 제고
- 계약, 재산, 회계 등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실태점검을 통해 제도적 개선방안 도출 및 기관운영의 내실화 도모

2 감사대상 및 범위

- 2019. 11월 이후 처리한 업무 전반

3 감사기간 및 인원

- 2022. 10. 31. ~ 2022. 11. 11.(10일), 감사담당관 외 3명

4 감사 중점사항

- 항만·어항 건설, 선박항행시설 운영 및 안전관리 실태
- 회계 및 국유재산 관리 등 기관운영 실태 점검
- 공유수면·항만시설 관리 및 사용허가 실태
- 선원업무 및 관공선 운영·관리 적정 여부
- 예산집행 및 계약 체결의 적정성 여부

II 감사 결과

항만 관리운영 및 해양수산 기능 전문화

1. 부두 임대 갱신계약 평가 업무 미흡

- 군산청은 「항만운송사업법」 및 「부두운영회사의 선정 및 관리지침」에 따라 2019. 11월 이후 부두 임대 계약을 2회 갱신

[표] 군산청 부두 임대 갱신계약 현황('19. 11 ~ '22. 11.)

구분	변경계약일	변경계약기간	계약상대자	주주사	비고
군산항 6부두 (61,62선석)	'20. 2. 17.	'20. 4. 1. ~ '25. 3. 31.	□□□	○○○ 100%	양곡부두
군산항 7부두 (71,72,73선석)	'21. 7. 5.	'21. 7. 18. ~ '26. 7. 17.	▽▽▽	◎◎◎ 35%, △△△ 35%, ◇◇◇ 30%	잡화부두

- 「부두운영회사의 선정 및 관리지침」에 따르면 항만시설운영자는 부두운영회사의 항만시설 분할운영 여부를 현장 실사 및 설문 등을 통해 매년 점검하여 임대 갱신계약 시 결과를 반영하여야 함
 - 그런데, 군산청은 군산항 7부두(71,72,73선석)의 항만시설 분할운영 여부 점검을 매년 이행하지 아니하고 부두 임대 갱신계약 직전('21. 1월 ~ 3월)에만 점검을 실시하고 갱신계약을 체결
 - 또한, 군산청은 군산항 6부두(61,62선석) 및 7부두(71,72,73선석) 부두 운영회사에서 부두 임대 갱신계약 평가를 위하여 제출한 화물유치 계획에 대하여 객관적 증빙자료(화주와의 계약서 등) 확인 없이 계획 물량을 모두 인정하고 평가에 반영
- ➔ **(행정상)** 부두 임대 갱신계약을 위한 점검 및 평가 업무를 소홀히 한 군산청에 대하여 “주의” 처분(기관주의 1)

2.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관련 제도 이행 소홀

- 항만법령에 따라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승인 업무 처리시에는 허가 및 승인 사실을 고시(공고)하고, 일정 기간 내 공사착수신고서를 제출토록 하는 등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함

근거	준수사항
법 제9조제9항 시행규칙 제7조	·항만관리청은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시 시행자 인적사항, 사업 명칭 및 장소, 사업 개요 등 그 사실을 고시 해야 함
법 제10조제1항 영 제17조제1항 및 제2항	·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를 받은 비관리청이 사업 실시계획 수립 또는 변경 시 항만관리청이 시행자 인적사항, 사업 종류 및 목적 등 사업 개요를 공고 해야 함 ·항만관리청은 공고내용을 관보·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 하고, 홈페이지 또는 접근성이 높은 장소에 게시 함
법 제11조 업무처리요령 제21조	·비관리청은 사업실시계획 승인 또는 신고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개발 사업을 착수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한 기한까지 준공 해야 함 ·항만관리청은 비관리청에게 지정하는 기간에 공사를 착수토록 하고, 공사착수 후 5일 이내에 공사착수신고서를 제출 토록 해야 함

- 그러나, 군산청은 허가 및 승인사실을 적기에 고시(공고)하지 않거나 누락, 공사착수신고서 미접수 등 법령에서 정한 의무 이행에 일부 소홀히 함
- 국가 비귀속시설 중 주요시설(안벽, 잔교 등 계류시설, 창고, 사일로, 유류 저장시설 등 화물 유통·판매시설 등)을 제외한 기타 시설(하역시설, 친수 시설, 기타 항만지원시설)에 대한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수립 시에는 준비서류가 간소한 실시계획신고로 처리해야 함
- 그러나, 군산청은 관련 규정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비관리청에 실시계획승인 신청대상임을 관행적으로 안내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
- ➡ **(행정상)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승인(신고) 업무 처리 시 항만법령 등 관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항만관리청의 권한 및 의무이행사항 준수 소홀에 대해 “경고” 처분(기관경고1)**

3. 내항화물운송사업 관리 부적정

- 「해운법」 제27조의2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사업 수행 실적이 2년 이상 없는 경우 지방청장은 등록을 취소하여야 함
 - 군산청은 2020년 이후 사업 수행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7개 사업자에 대하여 추가 조사나 등록 취소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음
- ➔ **(행정상)**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사업 수행실적을 재조사하여 사업 수행 실적이 2년 이상 없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는 등 사업관리 철저 요구(통보1)
- ➔ **(신분상)**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사업 수행실적 확인을 소홀히 하고 후속조치를 하지 않은 관련자(1명)에 대하여 “주의” 처분 요구(주의1)

4. 어업경영체 등록업무의 객관성 강화 필요

- 군산청에서는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) 제4조에 따라 연 평균 약 400여 건의 어업경영체 신규등록과 약 1,500여 건의 변경등록 업무를 처리 중
- 수산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지원사업 조건, 제출 서류 대체, 부정수급 방지 등 정책자금 집행의 투명성·효율성을 제고를 위해서는 정확한 어업경영체 정보* 등록이 매우 중요
 - * 어업인(법인)의 성명·주소, 어업·양식업 면허·허가·신고 현황, 어업시설 및 양식시설의 면적, 어선 규모, 경영형태, 어종별·품목별 생산량 등
- 그러나, 군산청을 비롯한 11개 지방청에서 어업경영체 등록 신청인 으로부터 제출받는 어업소득 증빙서류 인정 범위가 통일되지 않으며,
 - ※ 국세청, 지구별 수협 등이 발급하는 사업자 수입금액증명, 위판 내역 등을 제외 하고는 어업소득으로 인정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범위가 모호
- 수산정보통합시스템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없거나 사실관계가 의심되는 사항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나, 임의사항이므로 지방청별 조사 양태가 일관적이지 않음

- ➡ **(행정상)** 11개 지방청의 업무 처리기준이나 현지조사 방식 등을 점검하고, 현장 의견을 수렴해서 개선방안을 발굴하는 등 정책집행의 객관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(통보 1, 본부 소득복지과)

5. 군산항 임시 준설토 투기장 조속 마련 필요

- 금강 하구의 특성 상 군산항과 장항항은 지속적인 토사의 유입으로 연간 약 300만m³의 토사를 유지 준설토하고 있으며,
 - 군산청은 준설토를 새만금의 매립재로 활용하도록 하는 새만금 종합 개발계획(2011년도) 등에 따라 기존에 준설토 투기장으로 활용했던 금란도 투기장에 더하여 새만금 산업단지(3공구)에 준설토를 투기해 왔음
- 기존의 투기장인 금란도의 경우 투기 용량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으며, 운송거리의 한계 및 관계기관의 계획 수정에 따라 새만금 지역에 준설토 투기가 곤란한 상황이 전개됨에 따라,
 - 군산청에서는 새로운 준설토 투기장 조성계획을 마련하여 제4차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('20.12.)에 반영*

* 신규 준설토 투기장 조성계획은 최근 기재부의 예타를 통과('22.8.)

- 그러나, 관련 절차 및 조성기간 등을 감안했을 때, 군산청에서는 2026년도 이후에나 신규 준설토 투기장에 유지준설토 투기가 가능
 - 따라서,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군산항 및 장항항 내 발생하는 유지준설토를 임시 투기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대처할 필요

- ➡ **(행정상)** 군산항 및 장항항의 원활한 항만기능 유지를 위해 제2 준설토 투기장 이용가능 시점 전까지 임시로 활용할 수 있는 준설토 투기장을 조속히 검토하여 마련 요구(통보1)

6. 항만운영세칙 관리 미흡

- 「항만법」에 따라 항만관리청은 항만을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하기 위하여 항만별로 항만시설 내역 등을 포함하여 항만운영세칙을 규정하고 고시하여 관리하고 있음
- 그런데, 군산청은 “군산항 내항 호안정비 및 물양장 축조공사” 준공(2018. 10. 31.) 이후 군산항 부선부두 임시계류시설(98m)을 군산·장항항 항만운영세칙에 반영하여 고시하지 아니하고 운영 중
- ➔ **(행정상)** 항만시설을 재검토하여 항만시설이 누락되지 않도록 항만운영세칙에 반영하여 항만시설을 관리·운영하도록 요구(통보 1)

기관 운영 업무 개선 및 체계화

7. 시설공사 하자검사 업무처리 부적정

- 「국가계약법」 및 「(계약예규)공사계약일반조건」에 따르면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의 정기검사를 실시하고,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시 별도의 최종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
- 그런데, 군산청은 정기검사와 최종검사를 병행하여 실시하거나 검사기간을 미준수하였으며, 일부 최종검사조서를 분실하는 등 하자검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함
- ➔ **(행정상)** 하자검사 및 관련 기록물(하자검사조서)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군산청에 “주의” 처분(기관주의 1)

8. 행정규칙 관리 소홀

-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 제7조 제3항 및 「해양수산부 법제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」 제26조 제3항에 따라 설정된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해당 행정규칙의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폐지, 유지 또는 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

- 특히, 법령의 위임에 따라 법령을 보충하는 내용을 규정한 행정규칙의 경우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법규성을 가지고 있고,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지속적인 재검토와 법제 정보시스템 등재 등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.

- 그런데, 군산청에서는 일몰제 적용 대상 행정규칙의 일몰제 미적용, 재검토기한 만료 미조치,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법제 정보시스템 미등재 등 소관 행정규칙 관리를 소홀히 함

➡ **(행정상)** 소관 행정규칙을 검토하여 개정·폐지 등 재정비하고 법령 정보시스템에 등재하여 관리할 것을 요구(통보 1)

9. 미수채권 회수 등 관리 및 해소노력 소홀

- 「국가채권관리법」 및 우리부-한국자산관리공사 간 「국가채권 채납액 회수업무 위탁계약서」 등에 따르면, 군산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 협조 하에 독촉, 재산조회, 압류 등 채권 회수를 위해 노력해야 함

- 그러나, 군산청은 각 부서의 미수납 해소를 위한 노력 정도가 일관 되지 못하고,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채납액 회수 의뢰를 일부 이행하지 않는 등 소멸시효가 도래하지 않은 231건(324백만원)의 채권 회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

- 「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」 및 「군산청 수입금채납정리위원회 구성·운영에 관한 예규」에 따르면, 군산청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 자체 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통해 불납결손 처리해야 함

- 그러나, 군산청은 총 350건(298백만원)의 시효 완성 장기미수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, 채권 내용, 채납기간, 그간 회수 노력 등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대상을 선별·정리하고, 위원회를 통해 최종 처분 여부를 결정하는 등 불납결손 처분을 위한 노력에 소홀

➡ **(행정상)** 부서별 미수납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유하고, 캠프에 적극적으로 회수업무를 위탁하는 등 미수납 채권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방안 강구 요구(통보1)

- ➡ **(행정상)** 기 수립한 '장기미수채권 해소방안'을 토대로 본부와의 협의 등을 거쳐 장기미수채권을 적극적으로 해소 요구(통보 1)

10. 하자처리 후속조치 이행 필요

- 「(계약예규) 공사계약일반조건」 제34조 따르면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계약담당자가 하자보수를 요구하고, 계약상대자가 불응할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여 직접 사용 하는 등 발생한 하자를 조속히 복구하기위해 노력해야 함
- 그런데, 군산청에서는 '군산항 재해취약지구(외곽시설) 정비공사' 등 2건의 공사에 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음에도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어 이용객의 안전사고가 우려됨

- ➡ **(행정상)** 미이행된 하자보수에 대한 조치 방안 강구 요구(통보 1)

□ 현지처분 (3건)

1. 계선 및 계류선박 관리 강화 필요

- 「선박입출항법」 및 해양수산부 “무역항 중점관리지침”에 따르면 계선선박 관리 강화, 계류선박에 대한 스티커 부착 등으로 항내 질서 유지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지방청에 통보

<계류선박 관리 개선>

- 항만시설 운영규정 개정, 업무매뉴얼 구축, 스티커 부착
- 사용승낙 스티커의 경우 1년단위로 갱신

계선	단기승낙	현장계고	사용승낙(어선)	사용승낙(비어선)
				

- 그런데, 군산청은 계류선박 관리 개선방안에 따른 계선 및 계류선박에 스티커 부착을 통한 관리 등을 미이행
- ➡ **(행정상)** “무역항 중점관리지침”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선 및 계류선박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요구(통보 1)

2. 선박수리허가 업무 안전조치 강화 필요

- 해양수산부는 “무역항 중점관리지침”에서 선박수리 허가(신고수리) 시 선박수리 작업계획서상에 「산업안전보건법」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조치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통보
 - 그런데, 군산청은 선박수리 허가신청(신고) 시 제출하는 작업계획서상에 「산업안전보건법」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조치 이행 사항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허가(신고수리)하고 있음
- ➔ **(행정상)** “무역항 중점관리지침”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수리허가(신고수리) 시 신청한 작업계획서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요구(통보 1)

3. 사전정보공개 업무 처리 미흡

- 군산청에서는 「군산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행정정보 공표, 심의회 운영 등 정보공개 업무 수행중
 - 그러나, 공표해야 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·주기·시기 및 방법을 정해 목록을 작성·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고,
 -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전공표정보의 경우에도 관련 정보가 최신화되지 않는 등 사전정보공개 업무 처리가 미흡함
- ➔ **(행정상)** 사전행정정보공표 목록을 현행화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, 사전공표정보 게시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정보공개 업무를 적극적으로 이행 요구(통보1)